

건설동향브리핑¹⁾ - 건설 경제 및 정책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I. 건설 경제 동향

1. 2030년 건설시장, 선진국형으로 본격 변화

- 시장 규모 면에서 성숙기 지속, 질적으로는 3가지 큰 변화 예상 -

건설동향브리핑 제503호(2015.03.23.) 이홍일 연구위원

■ 양적 변화 : 2030년까지 현재 규모 유지, 신축 축소 및 유지·보수 확대

실질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3~20년 동안은 0.8~1.5%, 2020~30년 동안은 이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다소 낮은 0.6~0.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이후 건설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신축 시장이 축소되어 쇠퇴기로 진입하는 반면, 유지·보수 시장이 성장기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건설시장은 2030년까지 현재 규모를 유지하며 성숙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2020년 이후 신축 시장은 축소되고, 유지·보수 위주로 시장이 전환될 전망이다.

■ 질적 변화 : 2020년 이후 선진국형 시장으로 변화 본격화

2020년 이후 국내 건설시장은 본격적으로 선진국형 시장으로 전환될 전망으로 국내 건설시장 질적 변화의 3가지 축을 살펴보면 첫째, 신축 위주에서 유지·보수 위주로 시장 전환이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건설시장에서 유지·보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국내 건설투자의 경우 1990년대에 가장 급성장했고, 당시 신축된 수많은 시설들이 2020년 이후에는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하면서 이후 우리나라도 유

지·보수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시트법상 1·2종 시설물 중 사용 연수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물(건축물 제외)은 2008년 말 기준 8.4%에서 2014년 3월 9.5%로 증가했으나, 향후 증가세가 빨라질 전망이다. 주택 역시 2020년 이후 노후 주택이 증가해 유지·보수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노후화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재 주택재고의 50% 이상이 아파트인데, 1990~2000년에 건설된 아파트가 아파트 재고의 45%를 초과하고 있어 이 아파트가 2020년 이후 준공된 지 30년 이상이 되면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급증될 것이다.

둘째, 신축시장의 축소 및 질적 변화와 관련해서 우선 공공시장의 경우 예산 제약이 있는 가운데 2020년 이후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투자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신축 공사의 발주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지·보수 투자도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 성능 개선보다 단순 보수/보강 위주 투자가 예상돼 신축과 더불어 유지·보수에도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운영 시장의 본격 확대와 관련해서는 주택의 경우 해외 사례를 기초로 볼 때 향후 주택임대사업 자체가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과도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SOC 시설의 운영시장의 경우 민자시장 증가,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의 시설 민간위탁관리 흐름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 정부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 상반기 3조원 추가 조기집행, 연내 7조원 투자 확대 -
건설동향브리핑 제504호(2015.03.30.) 이홍일 연구위원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간으로 발간하는 「건설동향브리핑」은 건설 경제·정책·경영 이슈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회지 [CEM Info] 색면에서는 「건설동향브리핑」 최신호 일부를 요약하여 게재하고자 합니다. 소개된 전문은 www.cerik.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확정, 발표하였다.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금융 등 거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여 유효수요를 증대시킨다는 방침하에 상반기에 3조원의 추가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확대 등을 포함한 연내 7조원 투자확대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

구분		규모(조원)
조기집행	재정	20
	46조원 패키지	11
	합계	31
투자확대	공공기관 투자	14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5.0
	현장대기프로젝트	0.5
	합계	6.9

자료 : 기획재정부

■ 3조원 규모 추가 조기집행 상반기 실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재정집행과 46조원 정책 패키지를 합쳐서 모두 3조원의 추가 조기집행을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투자펀드의 지원한도를 현행 건별 150억원, 업체별 200억원에서 모두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현행 안전산업, 안전설비 도입 기업 외에 안전대진단 관련 수주기업, 노후시설 개선 기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투자 1.4조원 추가 확대 등 연내 7조원 투자 확대

연내 7조원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즉, 공공기관 투자는 유가하락, 부지매각 등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한전 등을 중심으로 당초 계획대비 연내 1.4조원의 추가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금년에 5조원을 확대하며,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신규 공장설립 등 법령상 불합리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민간부문 투자를 조기 가시화할 예정이다. 민자유치 확대와 관련해서는 민자유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민·관 간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신규 사업방식의 도입, 절차 간소화 등 통해 민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4월 중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과 같은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에 따라 그동안 다소 부진했던 SOC 예산의 조기집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며, 공공기관 투자 확대에 의해 공공 수주물량도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3. 2014년 건설투자 1.0% 증가, 회복세 다소 주춤

- 2014년 4/4분기에 1.5% 감소해 부진, 다만 점진적으로 수치가 개선될 전망 -

건설동향브리핑 제507호(2015.4.20) 박철한 책임연구원

■ 2014년 4/4분기 1.5% 감소로 7분기 연속 증가세 마감, 회복세 주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25일, 2014년 건설투자(잠정치)가 198.4조원, 1.0% 증가에 그친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예상보다 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3년 연속 감소 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5%, 1.0% 증가해 2년 연속 증가하였지만, 2014년 실적은 198.4조원으로 여전히 2010년 200.8조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건설투자 잠정치가 예상보다 낮은 것은 4/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기 때문으로 비주거용 건축투자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토목투자가 감소한데 기인한다.

〈2014년 건설투자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금액(2010년 실질 가격 기준)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건설투자	주거용 건축	비주거용 건축	토목	건설투자	주거용 건축	비주거용 건축	토목
1/4	39.3	12.1	13.2	13.9	4.1	17.2	0.5	-2.1
2/4	54.0	15.0	19.2	19.8	0.2	9.1	-0.6	-4.9
3/4	51.9	14.2	20.5	17.3	2.3	9.1	3.5	-4.0
4/4	53.2	13.9	18.5	20.8	-1.5	2.3	0.9	-5.7
2014	198.4	55.2	71.3	71.8	1.0	8.9	1.2	-4.4

자료 : 한국은행, '2014년 국민소득 잠정치', 2015년 3월 25일.

■ 올 상반기 건설투자 작년 4/4분기 흐름을 이어가 다소 주춤, 향후 점차 개선될 전망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확장적 통화·신용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주거용 건축투자가 올 상반기에도 여전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올해 SOC 예산이 작년 대비 4.7% 증가하고, 지난 3월 정부가 상반기 3조원 추가 조기집행과 함께 연내 7조원 투자를 확대기로 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을 감안, 토목투자는 점차 감소폭을 낮추면서 연내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건설투자는 작년 4/4분기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이나,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욱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4. 2012~14년 지역별·소득계층별 주거소비패턴 달라져

- 자가점유율,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방 자가점유율 ↓ -

건설동향브리핑 제508호(2015.4.27) 허윤경 연구위원

■ 자가보유율 지속적 하락, 2014년 현재 58.0%에 불과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2014년 주거실태조사' 전체 지표를 발표하였고 최종 연구보고서 및 마이크로데이터는 4월 23일 발표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전국의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 모두 하락하였는데 특히, 자가보유율은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지난 2년 동안 소득계층별 주택의 점유 및 소유형태는 다른 패턴을 보여 고소득층은 자가보유율·자가점유율이 상승, 저소득층은 자가보유율·자가점유율이 하락, 중소득층은 자가보유율 하락·자가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별 주거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되나, 중소득층 주거 소비패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수도권, 자가점유율은 소폭 높아져

주택가격 약보합, 전세가격 급등세를 보인 수도권은 지난 2년 동안 자가보유율은 낮아졌지만, 자가점유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자가점유율의 상승은 임대차시장을 이용하는 가구 비율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도권 중소득계층의 자가점유패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이후 수도권의 임대차시장은 월세는 증가하고 전세는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되나, 2014년 전세 비중이 53.9%로 월세보다는 전세 우위의 입차 계약 형태임이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자가점유율이 낮아 임차를 이용하는 가구가 많고 전세 비중도 높아 전세제도의 활용도가 높고 월세 저항이 강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 광역시 자가보유율·자가점유율 상승, 기타지방은 모두 하락

지난 2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세는 동일하나 광역시는 자가보유율·자가점유율이 동반 상승하였으나, 기타지방은 자가보유율·자가점유율 모두 하락하였다. 또한, 광역시는 2008년부터 월세 우위시장이 시작되어 2014년 월세 비중은 62.3%에 이르고 있다.

※ 광역시 월세 비중 변화 : 2006~08년 0.6%p, 2008~10년

5.6%p, 2010~12년 0.4%p, 2012~14년 6.2%p 증가

II. 건설 정책 동향

1. 건설 환경변화에 대응한 발주·입찰 제도의 혁신 필요

- 건설수요 축소, 기술·공법 발전, 공정거래 요구, 안전·품질 강화 등에 대응해야 -

건설동향브리핑 제503호(2015.3.23) 최민수 연구위원

■ 건설기술 발전 및 수요 다양화에 대응해 다각도의 입·낙찰 방식 활용해야

향후 건설산업 환경의 변화 요소로는 1) 건설수요 축소, 2) 기술·공법의 발전, 3) 공정거래 의식 향상, 4) 시장경쟁 심화, 5) 안전·품질·환경 중시 등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먼저, 건설수요의 축소에 대응하여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위해서는 공공입찰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찰자에 대한 변별력(Screening)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면허/등록 제도를 현실화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공공입찰제도 운영 과정에서 등급 경쟁이나 과잉자격(Over-Qualification) 검토 등을 통하여 호혜 평등한 입찰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건설 생산기술 및 시공법의 발전이 현격하나, 설계와 시공 업역의 분리 등으로 시공성(Constructability)이 부족한 설계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설계와 시공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려면 건설 관련 업종 간 겸업 허용을 장려하고, 건축설계와 시공의 업역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제한입찰이나 순수내역입찰, 견적입찰방식 등을 통하여 설계 단계나 내역서 작성 단계에서 시공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되며 다양한 기술 발전이나 복합화 된 건설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 발주나 입찰 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불공정 거래 유인하는 입찰 제도 개선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 환경 조성 필요

입찰담합이나 덤핑입찰 등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입찰 제도상의 담합 유인을 개선하고,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 등 기술경쟁을 지향할 수 있는 입찰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덤핑 낙찰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정가격을 적정화하고, 저가 입찰을 배제하려는 발주

자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 기술형 입찰의 평가 요소에서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 단축을 중시하고 있으나, 향후 품질이나 안전, 환경관리 개선 등 기술제안 요소를 중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설정 시 적정한 예산에 기초하고, 설계금액의 인위적인 삭감 행위를 금지하고,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축적 업무를 발주기관이나 민간의 적산 전문기관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외생적으로 정해지는 불합리한 저가심사 기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세부공종 단가심사 등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덤핑판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 AIIB 창립의 파급효과와 과제

- 건설수주 확대의 기회, 이윤 극대화 위한 외교적 노력 요구됨 -

건설동향브리핑 제505호(2015.4.6) 손태홍 연구위원

■ 중국 주도의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의회 연설에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Asia Infrastructure Bank'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이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었다. 현재까지 참여를 밝힌 국가는 최소 47개국이며, 미국과 일본 및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G20 국가 중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국가는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로 인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연차총회 첫날인 3월 26일에 참여 의사를 발표하였다.

AIIB는 중국의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지역 경제 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실크로드)' 계획에서 자금조달 및 운용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 아시아 인프라 수요 연간 7,000억 달러 이상, 양질의 수주 기회로 작용

아시아개발은행은 「Infrastructure for Asian Connectivity」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산업화·도시화 및 연결성 등의 수요로 2020년까지 총 8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8조 2,000억 달러 중 중국이 53%, 인도가 26%, 동남아시아가 13%이며, 분야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49%에 달하며 교통과 통신 분야가 각각 35%와 13%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건설시장에서 국내 건설기업은 지난 5년 간 연평균 약 200억 달러의 수주 규모를 달성하고 있으나, 2014년에는 전년 대비 42% 급감하였다.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금의 공급은 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증가시키는 만큼 아시아 건설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은 심화될 수 있지만, 연간 7,300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수요는 국내 건설기업에게 양질의 수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 이익 극대화 위해 투자의사결정 참여권한 확보 등 외교적 노력 요구됨

건제와 균형이 조화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가 이뤄질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서비스 지향적인 운영 체제 구축은 AIIB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향후 AIIB 회원국들 간의 지분율 확보를 포함한 투자의사 결정 등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분율 확대, 투자의사결정 참여권한 확보 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3.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시장구조 왜곡 우려²⁾

-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예외 규정의 확대보다 견업을 장려해야 -

건설동향브리핑 제507호(2015.4.20) 나경연 연구위원

■ 경직적 업역 체계를 완화하려는 정책 방향

건설업의 칸막이식 진입규제를 해소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건설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견업 제한 규정을 200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견업을 장려하는 제도를 2013년에 도입하였다.³⁾ 건설업의 경직적인 업역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견업을 촉진하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예외 규정으로 적용 가능한

2) 본고는 최민수·나경연(2014),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설이슈포커스의 주요내용을 요약함.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전문건설업체에서 중합건설업 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나 자본금 충족 기준을 1/2로 경감하는 등 상호 시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견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입법예고가 행해졌다.⁴⁾

■ 대형 전문업체 위주 수주로 중소기업 보호 취지 위배 가능성 커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크게 상향할 경우, 전체 건설시장에서 10억원 미만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17~20% 수준이지만,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 이상으로 10억원 미만 공사는 건수 기준으로 전체 건설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실제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 전문공종을 등록한 대형 업체인데 보유 공종 수가 3개 이상인 그룹의 비중은 전체에서 소수의 비중(8.9%)이며, 4개 이상인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전문건설업체의 자본금 평균을 상회해 보유 공종 수가 증가할수록 자본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 시장에서 대형 전문건설업체 위주의 수주가 이뤄지는 상황이 명약관화하여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대한 제도의 탈목적성이 우려된다.

■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조정에 관한 논점을 인지해야

본질적으로 복합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에게 시공권을 부여하는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전문건설업 등록 조건에 비하여 종합건설업은 자본금이나 기술 인력 측면에서 상향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 규모가 커지면서 고급 기술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발주자 및 건설 서비스 소비자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별도의 투자 없이 인위적인 시장 확대를 통해 시장성과를 추구하는 행위는 건설업 면허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장 구조 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예외적 조항을 확대하기보다는 하도급 비용의 적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종합심사제, 최저가낙찰제 폐해 개선해야

- 저가낙찰이나 전략적 가격투찰, 운에 의한 낙찰, 담합 우려 등을 배제해야 -

건설동향브리핑 제508호(2015.4.27) 최민수 연구위원

■ 승자독식 피하고, 대형사와 중견·중소사 간 호혜평등한 경쟁구도 만들어야

그동안 300억원 이상의 정부 발주공사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최고가치와 글로벌스탠더드를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입찰 제도로써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당초 종합심사낙찰제는 제도설계 과정에서 건설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지난해 LH공사의 1차 시범사업에서는 낙찰률이 71%로 최저가낙찰제보다 낮아져 논란에 휩싸였으며, 그 후 몇 번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업 간 수주 불균형 우려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종합평가낙찰제의 논란에 대응하여 투찰가격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대형사 수주독점 해소방안으로서 공동도급 장려, 시공여유율 제도 도입 등과 같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평가낙찰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며 중견·중소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공동도급을 장려하고 있으나 대형사가 대표사로서 공사를 수주하되 일정 비율을 중견·중소사에 분배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중견사가 직접 대표사로 수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시공여유율은 최근 1년 간 수주 건수 등으로 제한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공사를 수주했던 대형사들이 또다시 수주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수행실적이 부족한 중견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수주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 투찰가격 평가에서의 변별력 확보 및 공사 특성 고려한 계약이행능력 평가 필요

따라서 입찰자 자신의 견적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투찰토록 하되 저가투찰을 유인하는 인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 평가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세부공종의 단가심사를 강화하여 적정낙찰률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단가심사는 저가낙찰을 유인하고, 전략적 가격투찰, 운에 의한 낙찰, 담합 우려, 견적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계약이행능력 평가의 경우 해당 공사에 특화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보다 유연성 있는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4)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함.